

유럽연합(EU)

2003. 9

박영곤

(ygpark@kiep.go.kr)

I.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320만km²
- 인 구: 약 3억 7,680만 명(2001년 기준)

□ 행 정

- 공식국명: 유럽연합(European Union)
- 회원국(15개국):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 주요기구: 이사회(Council),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s),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등

□ 정 치

- 정부형태: 공동연합체
- 의 장: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2003. 7. 1 ~ 12. 31)

□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63년
- 협정체결: 섬유협정(1971), 세관협력협정(1997.4), 통신조달협정(1997.11), 과학기술협력 약정(1992.11), 기본협력협정(2001.4.) 등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단위	1999	2000	2001	2002
인구	백만명	375.5	376.0	377.9	379.0
GDP(명목)	십억달러	8,551.2	7,894.0	7,932.1	8,651.6
1인당GDP(명목)	달러	22,776	20,992	20,989	22,828
실질GDP증가율	%	2.8	3.6	1.7	1.1
소비자물가상승률	%	1.3	2.1	2.4	2.2
산업생산증가율	%	1.5	4.3	-0.3	-1.2
수출	십억달러	2,177	2,243	2,259	2,396
수입	십억달러	2,114	2,230	2,191	2,268
경상수지(GDP대비)	%	0.1	-0.7	0.0	0.7
환율(유로화)	달러대비	0.94	1.09	1.12	1.06

자료: DRI · WEFA. World Overview. June 2003.

2. 향후 경제전망

항목	단위	2003	2004	2005
GDP 성장률	%	1.1	2.0	2.5
소비자물가상승률	%	2.0	1.9	2.0
산업생산증가율	%	0.7	2.7	2.7
경상수지(GDP대비)	%	0.5	0.8	0.7
환율(유로화)	달러 대비	0.88	0.85	0.83

자료: DRI · WEFA. World Overview. June 2003.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

(단위: 백만 유로)

교역품목(SITC 기준)	수출		수입	
	2002	2003(1~2월)	2002	2003(1~2월)
0. 식품 및 산동물	159,077	25,587	170,150	27,090
1. 음료 및 담배	39,242	5,498	28,820	3,889
2.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56,691	9,556	82,699	12,953
3. 에너지	90,019	17,167	197,685	38,081
4.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8,312	1,418	8,775	1,566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384,232	63,579	312,327	50,437
6. 재료별 제조제품	384,911	60,244	338,414	53,917
7. 기계 및 운수장비	1,091,522	166,669	941,812	148,192
8. 기타 제조제품	296,446	46,974	315,475	51,559
9. 기타	75,494	11,244	84,407	14,645
합계	2,589,958	409,750	2,480,587	402,580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ropean Union trade. July 2003.

나. 지역별 수출입

1) EU의 역외 수출

(단위: 십억 유로)

순위	교역국	금액					비중 (2002년기준)
		1998	1999	2000	2001	2002	
1	미국	161.5	183.0	232.5	239.9	239.8	24.1
2	스위스	57.2	62.6	70.8	74.8	70.7	7.1
3	일본	31.6	35.4	44.9	44.9	42.3	4.2
4	폴란드	28.2	29.0	33.8	35.7	37.3	3.8
5	중국	17.4	19.4	25.5	30.1	34.1	3.4
6	러시아	21.2	14.7	19.9	28.0	30.4	3.1
7	체코	17.2	18.4	24.0	27.7	29.2	2.9
8	노르웨이	25.1	23.2	25.6	26.1	26.5	2.7
9	헝가리	16.9	18.4	23.0	23.9	25.0	2.5
10	터어키	22.2	20.6	30.0	20.3	24.3	2.4
합	계	733.4	760.2	942.0	985.3	993.9	100.0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ropean Union trade. July 2003.

2) EU의 역외 수입

(단위: 십억 유로)

순위	교역국	금액					비중 (2002년기준)
		1998	1999	2000	2001	2002	
1	미국	152.0	160.6	199.0	195.7	174.8	17.7
2	중국	42.0	49.7	70.3	75.9	81.7	8.3
3	일본	66.0	71.9	87.1	76.3	68.4	6.9
4	스위스	49.5	52.9	60.0	60.8	58.8	6.0
5	러시아	23.2	26.0	45.7	47.7	47.6	4.8
6	노르웨이	28.1	29.6	45.8	45.1	44.8	4.5
7	폴란드	16.2	17.6	23.3	26.6	28.1	2.8
8	체코	14.7	16.8	21.6	25.1	27.5	2.8
9	헝가리	14.7	17.6	22.0	24.8	25.3	2.6
10	한국	16.0	18.4	24.9	21.6	22.2	2.2
합	계	710.5	779.8	1,033.4	1,028.1	986.9	100.0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ropean Union trade. July 2003.

다. EU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

(단위: 백만 달러)

	1990-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해외직접투자(ODI)	117,308	183,708	220,945	415,365	715,741	968,019	365,182
외국인투자(FDI)	84,165	110,376	127,919	262,216	487,898	808,519	322,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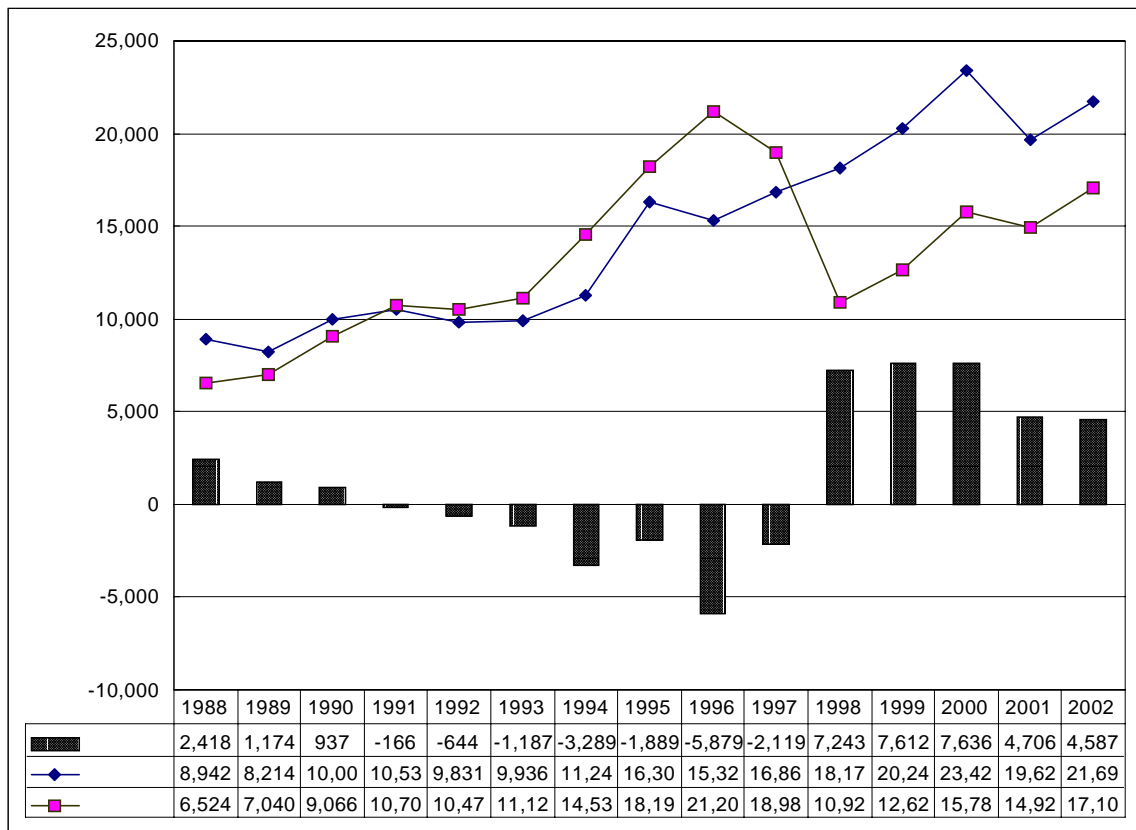
자료: United Nations.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4. 한·EU 경제관계

가. 교역

□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품목별 수출입 내역(HSK 2단위, 금액순)

<수 출>

(단위: 천 달러, %)

순 위	품목	2002		2003(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전기기와 그 부분품	5,502,695	12.8	3,531,037	20.8
2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5,043,638	10.1	3,175,398	12.0
3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3,069,530	9.1	2,399,948	63.2
4	선박과 수상구조물	3,430,285	24.5	1,724,257	-2.1
5	플라스틱 및 그 제품	547,813	21.9	338,333	2.7
6	고무와 그 제품	411,416	4.3	333,634	42.2
7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306,295	-13.7	219,520	30.2
8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분품	360,375	-4.2	206,680	9.8
9	인조장섬유	297,748	-7.3	186,687	9.1
총수출		21,694,037	10.5	13,805,279	18.6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수 입>

(단위: 천 달러, %)

순 위	품목	2002		2003(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3,792,870	19.4	2,489,415	16.8
2	전기기와 그 부분품	2,465,822	3.1	1,499,209	6.5
3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398,495	25.7	1,033,935	44.3
4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027,010	86.4	772,850	42.6
5	유기화학품	862,456	5.6	485,287	-3.3
6	의료용품	491,177	26.4	330,433	20.1
7	플라스틱 및 그 제품	479,986	7.6	313,023	14.4
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382,736	3.1	299,191	39.4
9	철강	328,580	0.8	210,220	21.0
총수입		17,106,636	14.7	10,800,603	13.4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나. 투자

□ 한국의 對EU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천 달러, 신고수리기준)

2000		2001		2002		2003(1-6월)		총누계 (1968~2003.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	179,107	52	2,200,210	54	1,088,400	13	127,694	596	7,555,17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정보.

□ EU의 對韓 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신고수리기준)

1999		2000		2001		누계(1962~200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13	6,251	377	4,392	300	3,062	2871	22,771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2002. 9.

III. 경제현안

1. EU의 경제현안

가. 개요

□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최근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EU는 여전히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유럽통계청(Eurostat)이 9월 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EU 경제가 2003년 2/4분기 전기대비 제로성장을 보였으며, 유로지역은 -0.1%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유로지역의 최근 경가지표

(단위: %, 전분기대비)

		2002. 3/4	4/4	2003.1/4	2/4
GDP	유로지역	0.2	0.1	0.0	-0.1
	EU	0.3	0.1	0.1	0.0
민간소비		0.3	0.3	0.5	0.1
수출		1.5	-0.4	-1.2	-0.5
수입		1.5	0.2	0.1	0.0
		2003. 3월	4월	5월	6월
인플레이션		2.4	2.1	1.9	2.0
산업생산		-1.2	0.4	-0.9	-
실업		8.7	8.8	8.8	8.9

주: 인플레이션은 전년대비,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자료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유로지역 경제는 1/4분기 전분기대비 제로성장에서 2/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2001년 4/4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산업생산도 4월 0.4% 증가에서 5월에는 오히려 0.9% 감소세를 보였으

며, 실업률도 6월 8.9%로 3년 반이래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음(표 1 참조).

- 회원국별로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지역내 대국들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만이 EU내 대국중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유로지역이 사실상 기술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선 양상임(표 2 참조).

<표 2> EU 주요회원국들의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 전분기대비)

국 가	2002. 3/4	4/4	2003. 1/4	2/4
독 일	0.1	0.0	-0.2	-0.1
프랑스	0.3	-0.1	0.2	-0.3
이탈리아	0.2	0.4	-0.1	-0.1
영 국	0.9	0.5	0.1	0.3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유로지역 경제가 2/4분기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던 것은 이라크 전쟁 및 사스위협과 더불어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 감소와 내수부진 등에 기인함.

- 역내적으로도 ECB의 경기부진에 대한 늦장대응과 안정 및 성장협약에서의 재정적자 한도로 인한 긴축재정정책 등에도 원인이 있음.

- 이처럼 유로지역의 부진한 경기에도 불구하고 ECB는 당분간 현행금리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2/4분기의 경기부진에 대해서 ECB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8월 월례보고서에서는 유로지역의 하반기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ECB는 9월 4일 정책이사회에서도 현행 2%인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음.

- 특히 최근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에서 신뢰지수들이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ECB는 당분간 하반기 경기추이를 주시하면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음.
- 유로지역이 2/4분기에는 부진한 경제성장세를 보인 반면, 7월 들어 발표되고 있는 경기지표들은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 유로지역의 7월중 제조업 PMI¹⁾의 경우 6월 46.7에서 48.0으로 상승하였으며, 서비스업 PMI도 전월대비 2포인트 상승한 50.2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상승함은 물론 7개월 만에 경기분기점인 50을 상회하였음.
 - 그리고 유로지역 최대경제국인 독일의 경우 경제연구센터(ZEW)가 발표하는 8월 경기체감지수가 전월 41.9에서 52.5로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 유로지역 전체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키고 있음. Ifo 지수도 6월 88.8에서 7월에는 1년 이래 최고치인 89.2로 상승하였음.
- 이는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 조짐에 따른 독일 제조업의 수주증가와 독일 몇몇 기업들의 양호한 재무상태 그리고 독일 정부의 ‘Agenda 2010’²⁾을 통한 구조개혁 노력과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추진계획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에도 통계경제연구소(INSEE)의 기업신뢰도가 6월 90에서 7월에는 91로 상승하였음.
- 현재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역내경기의 변화보다는 대부분 미국의 경기회복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경기회복을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임.
- 미국의 하반기 경기회복이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는 제한적일 것임.

1) 로이터/NTC의 구매관리자지수.

2) 노동시장, 의료보험, 연금제도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을 골자로 함.

- 미국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유로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유로지역보다는 동아시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임. 더군다나 유럽경기는 항상 미국경기를 후행하였기 때문에 미국경제가 하반기 회복되더라도 유로지역 경기가 곧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임.
- EU 집행위원회도 미국경제가 하반기 회복했을 경우에도 유로지역은 3/4분기 분기대비 0.0~0.4%, 4/4분기 0.2~0.6%정도의 경제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리고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은 경기신뢰지수 등의 개선에 근거한 것이며, 여타 경기지표들은 여전히 유로지역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음.
 - PMI 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PMI의 경우 여전히 50 이하 수준이며, 국별로도 7월 50 이상인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역내에서도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회원국들밖에 없음.
 - 또한 민간연구소의 경기신뢰지수와 달리 EU 집행위원회의 경기체감지수는 6월 98.1에서 7월에는 98.0으로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외에도 아직 고용경기도 부진한 상황으로 향후 소비증가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임.
 - 특히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은 6월 2.0%, 7월 1.9%로 유럽중앙은행(ECB)이 목표하고 있는 2%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하강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독일의 경우 7월 인플레이션이 0.8%로 유로지역 최저의 수준을 기록하였음.

나. 주요 경제현안 및 과제

1)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확대

□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역내 대국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재정적자 확대가 심화되고 있어, 유로지역 전체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이 대국들을 중심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들 회원국들이 2001년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세금감면과 정부지출 확대를 시행해 온데 기인함.

- 이에 반해, 유로지역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 3개국은 현재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

□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안정 및 성장협약에서 2004년으로 설정된 균형재정 달성시한을 2006년으로 연기하기로 2002년 11월에 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2년 연속 안정 및 성장협약의 재정적자 상한선인 GDP 대비 3%를 상회하고 있으며, 2003년에도 상한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대국들은 안정 및 성장협약의 목표준수치에 대한 탄력적인 운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임.

○ 이에 대해 집행위원회, ECB, 그리고 재정적자 목표치를 잘 준수하고 있는 소국들은 대국들의 긴축재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 회원국들이 안정 및 성장협약상의 재정적자 상한선을 상회할 경우에는 GDP의 0.5%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대국들에 이러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낮음.

- 이는 벌칙금을 부과할 경우 집행위원회뿐 아니라 유럽경제재무 각료이사회(Ecofin: European Council of Economics and Finance Ministers)의 결정이 필요한데 동 각료이사회에서는 대국들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국들의 입지가 높기 때문에 벌칙금 부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음.

2) ECB의 금리동결

□ 유럽중앙은행(ECB)은 2003년 9월 4일 개최된 정책이사회(Governing Council)에서 현행 2%인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음.

- 루카스 파파데모스 ECB 부총재는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최근 경기선행지수들과 기업 및 소비신뢰도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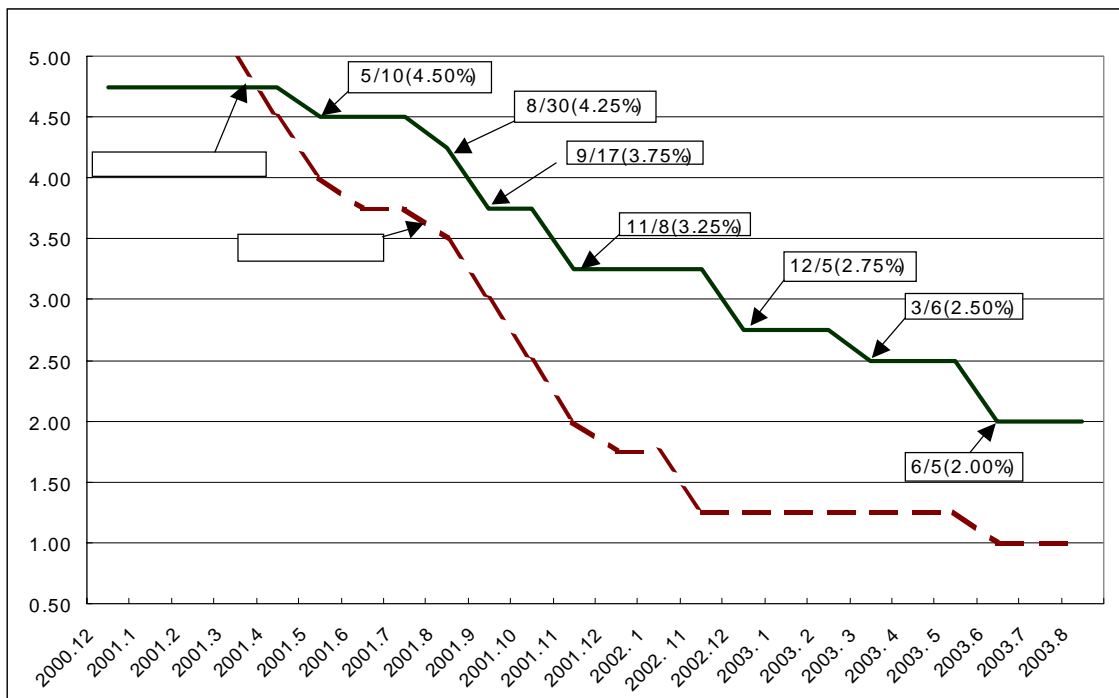
□ 이번 ECB의 금리동결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기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는데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다시 발생함에 따른 예상되었던 결과라 할 수 있음.

- 유로지역 경제의 1/3을 점하고 있는 제조업의 구매자관리자지수(PMI)가

7월 48에서 8월 49.1로, 서비스분야의 구매자관리지수도 7월 50.2에서 8월 52로 증가하는 등 경기선행지수들이 호전되고 있음.

- 경기지표 외에도 8월 인플레이션이 2.1%로 ECB의 정책목표치인 2%를 상회하였고, ECB 통화정책 운영에서의 두개의 핵심지수중 하나인 총유동성(M3) 증가율도 7월 8.5%로 정책목표치인 4.5%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도 금리동결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음.³⁾

<그림 1> 유로지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자료: ECB, FRB.

□ 그러나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경기선행지수들에 그치고 있으며, 여타 경기지표들은 여전히 유로지역의 경기부진을 드러내고 있어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

- 특히 OECD는 9월 5일 ECB 정책이사회가 있기 전인 9월 3일 유로지역 경제가 부진해질 것을 대비하여 ECB가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

3) ECB는 물가안정(2.0% 이내)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유동성(M3)과 경기지표 등 두개의 핵심지수(two-pillar)를 기준으로 하여 통화정책을 이행하고 있음.

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여 금리인하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음.

○OECD의 금리인하 권고는, 2003년 유로지역이 완만한 경제성장을 한다고 해도 0.5%선에 그쳐 당초 예상치인 1%의 절반수준일 것이며, 미국이 조만간 경기회복세를 보인다고 해도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세는 이에 뒤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임.

□ 더욱이 유로지역과 달리 미국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오고 있어 ECB의 정책대응이 미국 연준리에 비해 더디다는 지적이 많았음.

○미 연준리는 경기둔화가 시작된 2001년 이후 5.5% 포인트나 금리를 인하하여 현재 1%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ECB는 2.75% 포인트 인하하여 현재 2%를 유지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이와 같이 ECB가 미 연준리 등 여타 중앙은행과 달리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안정이기 때문임.

- 즉, ECB의 입장은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으로 이를 위한 통화정책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경기부양이나 고용증대를 위한 통화정책 운영은 이행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ECB가 아닌 회원국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임.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해 회원국 스스로가 구조조정이나 기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음.

- 이에 회원국들은 세금감면이나 재정지출 확대 등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재정적자 확대를 부추기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유로지역 경제가 최근 미미하나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다 인플레이션압력마저 존재하고 있어 당분간 현행 금리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ECB가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으로 정책목표가 전환되지 않은 한 금리인하는 쉽지 않을 것임.
- 그러나 하반기에도 GDP나 수출 등 실제적인 경기지표들이 호전되지 않고 경기부진이 이어진다면 ECB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 더욱이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승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의 급등 등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지표 또한 경기선행지수들을 중심으로만 호전되고 있음.
- 또한 독일과 프랑스 등 역내대국들이 제로 및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재정적자도 안정 및 성장협약 상의 상한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ECB가 경기부양의 책임을 회원국들에게만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임.

다. 대외협력 현안

1) 'EU 헌법' 초안 채택

- 2003년 6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그리스 테살로니키 EU 정상회담에서 EU 헌법 초안이 채택되었음.
- EU 헌법 초안은 유럽의 미래구상을 위해 2001년 2월부터 전 프랑스 대통령인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탕을 의장으로 한 포럼에서 각 회원국들의 의견조율을 통해 마련된 것임.
- EU 헌법초안의 주요내용은 EU를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대표성을 가진 법인격으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외교 분야 등에서 단일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것임.

- 이를 위해 EU 헌법초안에서는 ▶ 그동안 회원국의 순번대로 6개월간 의장국을 맡았던 제도를 상설 대통령제로 전환하고, ▶ EU의 행정부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EU 집행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하며, ▶ 외무부 장관직을 신설하고, ▶ 현재 시행중인 다수의결제를 확대하고, ▶외교, 안보, 조세 등을 제외한 비주요분야에 대한 회원국들의 비토권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동 헌법초안은 2003년 10월부터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이 시작되는 2004년 5월까지 정부간회의(IGC)를 통해 회원국간 의견조율 과정이 진행되며 이후 유럽의회의 비준을 통해 발효될 예정임.

- 그러나 EU 헌법초안에 대해 벌써부터 회원국간 이견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어 의견조율이 난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대통령제 신설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등 역내 대국들에서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국과 여타 소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조세와 국방 그리고 외교정책에 대한 다수의결제 확대에 대해서도 국가권리 침해를 이유로 영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2) 비유로권 3개국의 EMU 가입문제

□ 스웨덴은 2003년 9월 14일에 실시된 EMU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반대 강경론자들의 영향으로 부결되었음.

- 국민투표결과 540만명의 유권자중 56.1%가 EMU 가입에 반대하였으며, 41.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EMU 가입을 선도하였던 안니 린드 외무장관이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한주전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결과 부결됨에 따라 스웨덴내 EMU 가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음.

- 실제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국민투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 그 동안 EMU 가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2002년말까지는 찬성여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유로지역의 경기둔화 지속, 영국의 EMU 가입 불확실, 그리고 스웨덴내 가장 큰 노동조합인 LO의 EMU 가입 반대 등으로 반대여론도 상당수 존재하였음.

- 이번 EMU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국내적으로는 페르손 총리의 정치적 기반에 침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외적으로는 EU내 스웨덴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특히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은 스웨덴의 국민투표 결과 EU내 스웨덴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음("Sweden would lose influence in Europe").

- 이 외에도 이번 스웨덴의 국민투표 결과는 EU 회원국이면서 스웨덴과 같이 EMU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영국과 덴마크의 향후 EMU 가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 총리가 EMU 가입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는 있으나 유로지역의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반대여론이 강한 상황인데다 이번 스웨덴의 EMU 가입반대가 반대여론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음.
 - 덴마크에서는 지난 2000년 9월 EMU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53% 반대로 부결된 바 있으나, 최근 크로네의 강세로 인해 수출감소가 이어지면서 2003년 7월 여론조사에서는 EMU 가입에 대해 6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스웨덴의 EMU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의 결과가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안정을 중시하는 반대여론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2. 한·EU 경제협력 현황

가. 개요

□ 한국은 미국과 일본 중심의 교역구조에서 탈피하여 교역구조를 다변화해야 되는 시점이며, 이를 위해 EU와의 경제협력 관계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

- 더욱이 2002년 코펜하겐 EU 정상회의에서 중·동구 10개국과의 가입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EU는 2004년부터 향후 10년 이내에 기존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되어, 인구 4억 5천만명의 GDP 9조 유로, 교역규모 4조 6천억 유로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EU와의 교류확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중·동구국가들의 EU 가입에 따른 EU 확대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높은 구매력을 가진 거대시장의 형성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함과 동시에, 무역전환효과에 따라 EU의 역외교역비중이 축소될 수 있고 기존의 통상규범이 중·동구에 확대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함.

-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수출시장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경쟁압력 증대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임.

○그 동안 중·동구시장에서 고관세로 인해 진출하기 어려웠던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수출전략을 세우고, 기존 EU 기업과 경합관계에 있는 철강,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 대해 원가절감 노력을 배가하여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함.

○그리고 중·동구 국가들이 EU의 반덤핑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공식품, 화학 및 철강 등의 품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자동차와

의류산업 등은 현지 직접진출 즉, 관세회피성 직접투자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재 한국과 EU간의 교역 및 투자관계는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저조한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 추세임.

- 또한 한국의 對EU 무역수지는 1998년 이후부터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흑자기조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 2003년에도 7월 현재까지 수출은 138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8.6% 증가), 수입은 108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3.4% 증가)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의약품, 자동차 부품, 기호식품 등임.

□ 한국과 EU간 투자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특히 EU는 연간 약 3천억 달러 상당의 해외투자를 하는 세계최대 투자 주체이므로, EU로부터의 투자유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EU는 1998년부터 對韓투자를 급격히 증대해 오고 있으며, 1999년과 2000년에는 미국을 앞질러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기도 했음.

○ EU의 對韓투자는 2001년동안 총 300건에 30.6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주로 에너지, 전자 및 전기, 통신사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음.

- 한국의 對EU 투자는 2003년 6월 현재까지 총 596건에 75억 달러(1968년부터 누계기준) 상당으로 1998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나. 주요 통상현안

1) EU의 조선보조금 WTO에 제소

□ 한국정부는 2003년 9월 3일 EU가 조선산업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조선 보조금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음.

- 이와 같이 제소하게 된 배경은 EU가 회원국들에 대해 조선산업에 대한 운영보조금, 구조조정 보조금 잠정 보조금 등을 지급한데 따른 것임.
- 특히 잠정보조금은 EU의 조선업체들이 한국의 조선업체들과 경쟁하는 경우에만 선가의 6%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WTO 협정의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임.

□ 이번 제소는 EU가 한국의 조선보조금에 대해 WTO에 제소한데 따른 대응임.

- EU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조선업체들에 대해 수출금융 등 금융지원과, 채무면제, 이자 유예, 출자 전환 등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WTO에 2002년 10월 21일 제소한 바 있음.
- EU가 WTO에 제소하기전 수차례에 걸쳐 한국과 EU 양자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양자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음.
- 이후에도 2002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양자협의를 개최하였으나 타결되지 못하였음.
- EU의 WTO 제소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일부 조선업체에 대한 부채탕감, 출자전환 등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산업의 전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행된 것으로써,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없다는 것임.

- 한국정부의 제소에 대한 WTO의 판정은 향후 약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WTO 협정에서는 협의 요청 후 60일 동안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패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패널이 설치된 후 통상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6~9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 제소의 경우에는 보조금협정의 신속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5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2) EU의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

- 한국정부는 하이닉스 산 반도체에 대한 EU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8월 25일 WTO에 제소하였음.
- 이는 EU가 2002년 7월부터 한국정부의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대한 진위조사를 개시한 후 2003년 8월 11일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DRAM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데 따른 대응조치임.
- EU는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상업적 기준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지원조치를 정부보조금 성격으로 판단한데다, 하이닉스 DRAM이 EU 시장 내에서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EU 역내 DRAM 산업체들의 피해를 인정하여 하이닉스산 DRAM에 대해 34.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음.⁴⁾

3) 환경규제

- EU는 국제환경보호를 위해 자동차, 기계, 섬유, 전자제품, 식품, 해운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엄격한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한국의 對EU 수출

4) 당초 DRAM 조사결과 예비안에서는 33%였으나 6월 20일 EU가 제출한 최종문의안에서는 34.9%로 상향조정하였음.

에 장애가 되고 있음.

- 특히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수출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 이에 한국정부는 2002년 6월 한-EU 각료회담에서 EU의 폐가전제품처리 지침에 대해 재활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유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신물질 제작 기술의 이전과 정보공유를 요청하기도 하였음.
- 2003년 7월에 개최된 제2차 한-EU 공동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